

지방대 육성, 지자체가 주도하고 청탁 등 부정입학 시 ‘입학 취소’

고등교육법·지방대육성법 의결
지역 앵커사업 평가 후 예산 배분
대학혁신 위한 규제특례 체계화
지방대 육성계획 주체 시·도지사로
부정입학 허가취소 법적근거 마련

정부가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인재양성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및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절차를 마련한다. 사전 공모·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자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 근거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을 시·도와 교육부에 각각 두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했다.

또한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추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함께,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및 시·도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공개·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의 순환구조를 명확히 했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할 제도로 ‘규제특례’의 신청·연장 등의 절차를 체계화했다. 규제특례의 신청을 매년 9월 정기와 수시로 나눠 운영하고, 교육부 및 관계부처가 규제특례 부여 이후의 성과와 추진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따라,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출·수정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의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시·도의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학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입학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실시·평가 과정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청탁·사전 공모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응시해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세종문화회관 옥상 전경 조감도.

/서울시

광화문 한눈에… 세종문화회관 옥상 개방

서울시, 연내 옥상정원 조성·개방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북악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공공 옥상정원으로 조성해 연내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옥상정원 조성과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마쳤다. 세부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사에 착수한 뒤 연내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활용도가 낮았던 세종문

화회관 옥상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서울 도심 경관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옥상에서는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북악산을 조망할 수 있다.

또 옥상에는 녹지와 휴게공간, 전망데크, 카페가 들어선다.

외부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녹지와 휴게시설 배치, 카페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도자재단-NH농협, 경기도자비엔날레 지원

성공 개최 위한 후원·홍보 업무협약

한국도자재단이 NH농협은행과 손잡고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과 홍보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13일 NH농협은행과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의 후원 유치와 홍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자재단은 NH농협은행을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공식후원은행으로 지정하고, 비엔날레 휘장과 로고 사용 및 공인 업무 등에 관한 권리를 우선 부여한다. NH농협은행은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5억 원을 후원하고, 전

국 영업망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NH농협은행이 공식후원은행으로 참여하게 돼 뜻깊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도자문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오랜 기간 함께해 온 경기도자비엔날레가 올해 13회를 맞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는 ‘땅이 만든다(Earth Makes)’를 주제로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전 세라피아와 여주도자세상,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김대의 기자

우이신설선 무선제어 도입… 혼잡도 낮춘다

서울시, 차세대 신호시스템 도입
최고 혼잡도 약 22% 감소 전망

서울시는 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CBTC, 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선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은 무선 통신으로 열차가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로 열차 간 간격을 제어하는 신호 체계다. 열차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해 운행 시간을 단축하고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 궤도 회로 방식은 선로에 전기 신호를 흘려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장치인데 이는 배차 간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우이신설선은 새 장치를 적용하는 첫 노선이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1호 경전철이다. 출퇴근부터 통학 등 수요가 많아 현재 최고 혼잡도가 165%에 이른다.

데이터 중심 열차 주행과 관제가 가능해지면 촘촘한 배차가 가능해진다. 열차 혼잡도가 20% 이상 감소하고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열차 평균 속도가 향상되고 운행 간격이 단축되면 우이신설선 최고 혼잡도는

현재 165%에서 향후에는 143%로 약 2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잡도 100%는 정원이 꽉 찬 상태이며 150% 이상은 밀착 상태다.

시는 실시 협약변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지상 신호 설비 구축, 신호 장치 개조, 성능 검증, 통합 시험, 시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2032년 우이신설선 연장 개통과 함께 노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새 장치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이신설선을 시작으로 시는 향후에는 혼잡도가 높은 9호선, 2호선에도 새 장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신설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원스톱 대응
조사부터 법률상담, 치유까지 책임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 기구인 교권보호단을 운영하고, 피해 교

원을 전담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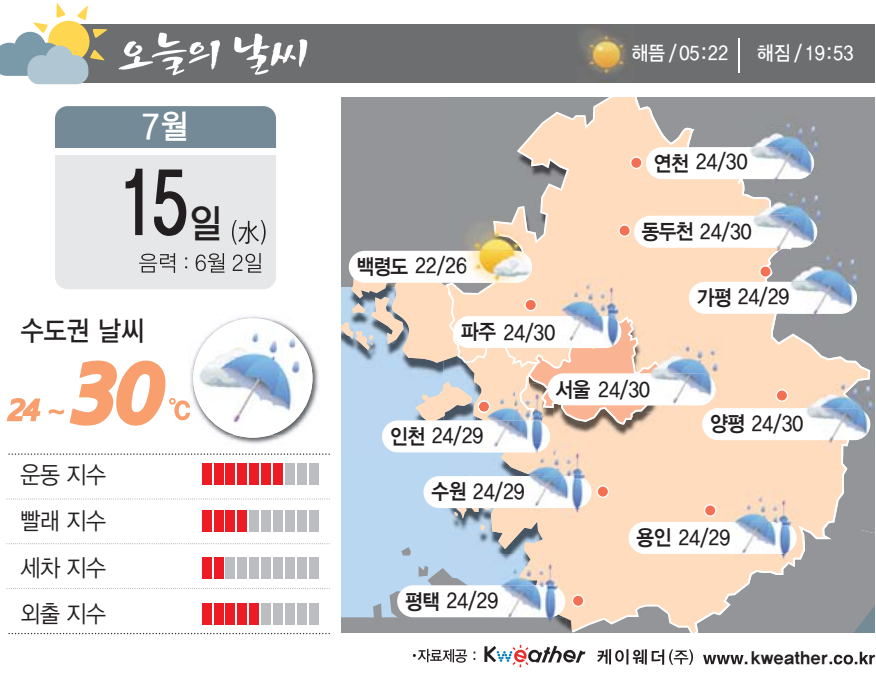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치유,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발생 시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1대 1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

또한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체제와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도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美연방항공청, 조사 종료…스페이스X, 16일 스타십 13차 시험비행
▲반도체 급락에도…애플 주가 ‘사상 최고치’

/사진 뉴시스

▲미국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선언에 국제유가 한 달 만에 최고치
▲“파라마운트-워너 인수, 경쟁 사라질 것”…美 12개주 반대

▲5만명 줄이기로 합의했는데 또 5만명?…폭스바겐, 감원 확대 카드 꺼냈다
▲‘드론 공습’ 우크라이네… 푸틴 “몇배 더 강력한 보복” 경고